

# 병역거부 운동:

##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것인가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1. 들어가며 - 병역거부 운동의 교차적 특성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에 저항하는 불복종 운동이다. 이때 불복종의 대상이 꼭 입영영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지만, 군인만 있다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총력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쟁에 저항하는 불복종 운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전쟁을 찬양하는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불복종,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과학자들의 선언들도 전쟁에 저항하는 개인의 불복종이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병역거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병역거부를 징집영장을 거부하는 행위에만 가두지 않고 전쟁에 기여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일체의 행동을 병역거부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역거부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징집제도 아래에서 입영영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로만 이해된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병역거부는 태생적으로 입영영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셈이다. 바로 여기서 병역거부운동의 중요한 특성이 나타난다. 많은 국가에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역거부 운동의 큰 자양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병역거부 운동의 태생적인 굴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징병제는 시민권을 가진 젊은 비장애인 남성만을 징집대상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병역거부의 주요 행위자는 시민권을 가진 젊은 비장애인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역거부 운동 내부의 권력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행위가 주목 받을수록 남성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사회적으로 병역거부 운동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며, 감옥에 갇힌 병역거부자는 전쟁 영웅에 대항하는 또 다른 남성 영웅이 되기 쉽다. 반면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민처럼 애초에 입영대상자가 아닌 이들은 입영거부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고 병역거부운동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병역거부자를 돕는 보조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기 쉽다.

또한 병역거부 운동은 계급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 불복종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은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양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계층이나 집단에겐 익숙한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특권이 없는 계층의 사람들은 병역거부보다는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병역기피’나 탈영을 하는 경향이 많다. 결과적으로 병역거부는 중산층

이상 계급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쉽다. 반면 가난한 계층이나 지역 사람들은 병역거부 운동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지막 특성은 병역거부 운동의 목표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만 여겨질 때 드러난다. 징병제는 역사적으로 시민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발전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될 수 있었고,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은 비국민 혹은 2등 시민으로 여겨졌다. 징병제가 끊임없이 비국민과 2등 국민을 양산하는 사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의미는 병역거부자가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시민권의 확장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시민권 개념 자체에 균열을 내지는 못하고, 여전히 비국민, 2등 국민으로 차별받는 이들로부터 병역거부자를 분리해내기만 하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사회의 기득권층의 특성과 겹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병역거부 운동은 자칫 시민권의 또 다른 확장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권자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젠더와 계급과 시민권의 문제가 다른 여러 사회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한다. 그리고 병역거부 운동은 이러한 특성들이 교차하며 만드는 여러 모순에 늘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병역거부 운동의 성공은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든지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서만 머무를 수 없다.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은 운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모순들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군사주의라는 운동의 가치와 이념이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내부에 위계가 발생하여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됐다.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했다. 특히 여호와의증인은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꾸준히 병역거부를 실천했고, 2000년 즈음에는 1600여 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호와의증인이 군대를 거부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사회에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를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다.

초기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 주목했다. 병역거부자들의 수감은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였다.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거부자들을 상담하고 재판과 수감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 것을 주장하며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거부자들의 지속적인 등장에 함께 했고,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과정과 감옥 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알려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등의 권고를 이끌어 냈다.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진보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체복무법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정부가 대체복무 입법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결정이 뒤바뀌기도

했다.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체복무법의 통과는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성과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조차 얼마 없던 곳에서, 군대를 비판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에서, 30년 전까지 군인들이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을 하던 나라에서 군대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들을 위한 제도가 첫발을 떼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통과된 법안은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무척 많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법안 도입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조차 후퇴한 것들이 많고, 새로운 안보나 평화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병역거부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교차적 특성들이 한국 병역거부 운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어떻게 대체해왔는지(혹은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병역거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3. 병역거부와 교차성

#### 1) 병역거부 운동 내의 성별 분업

병역거부 운동 초창기 활동가들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는 ‘왜 병역거부자들의 후원회장을 꼭 여성 애인이 하는가?’였다. 물자가 부족하고 열악한 감옥 상황 때문에, 수감자가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돌봄 노동은 수감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운동권 출신들이 돌봄 노동을 받는 것에 더 익숙했다.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온 이력 때문에 감옥 바깥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 지원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많았고 대부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sup>1)</sup> 대부분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던 2000년대 초반의 병역거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여성 지인이(주로 어머니, 여성 애인, 여동생) 감당했듯이 병역거부자들의 후원회장도 거의 여성이었고 대개 애인이었으며, 여성 애인이 있는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애인이 후원회장을 맡았다.

당시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은 병역거부 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특히 감옥에 가는 병역거부자 남성이 운동의 주인공이 되고 여성은 조력자로만 인식되는 구도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자와 후원인들에게 병역거부 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여성 애인이 후원회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몇몇 당사자들은 이런 의견을 불편하게 느꼈다. 병역거부자들의 수감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병역거부 운동에

1) 옥바라지의 젠더 규범, 특히 정치범들의 수감생활에 대한 젠더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병역거부자 현민이 쓴 책 『감옥의 몽상』에 실린 ‘정치범 수감자의 글쓰기와 남성성’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서 중요한 역할이고 자발적인 판단과 의지로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데, 전쟁없는세상의 문제제기가 마치 자신이 운동 내 성별 분업 구조 속에서 복무함으로써 성차별을 강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는 이유였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전쟁없는세상은 개개인 병역거부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전체 병역거부 운동에서 드러나는 성별 분업 경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없는세상의 문제의식을 공감대를 얻은 덕분인지 이후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의식적으로 후원회장을 애인이나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후원회장을 맡은 남성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여성 애인, 엄마, 여동생이 실질적인 후원회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후원회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겐 인정이라도 받았다면, 남성 후원회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할 일은 다 하면서 공식적인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비가시화되기도 했다.

후원회장 예피소드는 병역거부 운동 내부 성별 분업 문제를 보여주는 한 예시일 뿐이다. 운동 외부, 한국 사회 일반이 병역거부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는 젠더 규범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해왔다. 병역거부 주제로 신문에 기고를 하면 남성이라 생각하고 아무개 군이라고 쓴 항의 메일을 받는다는지, 십수년 활동을 해도 기자들이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멘트를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막 병역거부 선언한 사람의 전화번호만 묻는다는지 하는 경험을 여성활동가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겪어왔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병역거부 선언을 한 숲이아의 선언문<sup>2)</sup>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는 것이 긴 시간 함께한 전없세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없세 활동을 하는 동안 ‘~의 애인’으로만 비춰지는 거에 대한 긴장감을 줄곧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의 애인 숲이아’가 아니라 홀로 선 숲이아로 병역거부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비단 한국 병역거부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에도 영향을 준 터키의 평화활동가 페르다 울체시의 이야기는 병역거부 운동 내 젠더 역할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보여준다. “남성들은 아직도 병역거부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 병역거부자의 부인이나 여동생, 누나,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견해를 예사로 받아들인다. (중략) 하지만 여성의 병역거부 운동 참여에 대한 이와 같은 이유들은, 여성을 필연적으로 남성에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언은 우리가 이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다.”<sup>3)</sup> 페르다 울체시의 이야기는 터키 사회의 막강한 군사주의를 향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성 활동가를 ‘지지자’ 위치에 고정시키는 병역거부 운동 내의 젠더 규범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 2) 병역거부 운동에 젠더 분석이 중요한 까닭

페미니스트 연구자인 신시아 코번은 병역거부 운동에서 젠더분석이 중요한 까닭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sup>4)</sup> 첫째, 사회적인 모든 측면들은 속속들이 젠더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이슈들이 다 그러하듯 병역거부 운동의 필드도 젠더화 되어 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체복무 입법화를 위해 마주해야 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사회에 만연한 군사안보 이데올로기와 국제 정치 하에서 한국 정부의 위치와 외교 전술 등 모든 것에서 남성성의 역할

2) <http://www.withoutwar.org/?p=14675>

3)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경계, 2018, 38쪽.

4)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30쪽.

이 과학계 대표되고 있다.

두 번째, 군사주의와 사회의 군사화에 맞서는 병역거부 운동이라면 젠더 분석을 통해 군사주의와 군사화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권인숙에 따르면 군사주의의 개념 규정은 평화와 젠더적 질서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sup>5)</sup>우리는 젠더 분석을 통할 때만이 군사주의의 틈새를 벌려 그 뒤에 가려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페미니스트의 이야기를 살펴 보겠다.

위에 언급한 터키의 병역거부자 페르다 울체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여성은 운동의 단순한 ‘지지자’에 머물기에는 그보다 더 큰 지위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군사주의적 사고는 군대의 담장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을 지배하는 군사적 세계를 형성한다.”<sup>6)</sup> 병역거부는 종종 입영영장을 받는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는 한다. 하지만 군사주의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운동이 입영영장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김일란은 <공동정범>을 만든 뒤 인터뷰<sup>7)</sup>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고 있어요. 그 소외에 예민해지고, (이를 일으키는) 그 힘은 무엇인가를 봐요. 배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방식이 인권활동가로나 감독으로나 페미니즘 안에서 훈련돼 왔던 것 같아요.” 김일란이 군사주의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배제의 메커니즘은 군사주의의 핵심적인 연료이며 군사주의가 강화해나가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적군과 아군,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은 모두 군사주의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리고 이 구분을 유지시키는 수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폭력이다. 김일란이 “유가족 여성과 여경의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말도 없이 망루 투쟁을 하러 간 남편도, (과잉진압으로 비판받았던) 경찰 지휘부도 다 사라지고 유가족 여성과 여경만이 남은 현장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투쟁 현장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배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구를 소외시키는지 꾸준히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사주의에 대한 젠더 분석은 군사주의의 이분법으로는 미처 보지 못하는 소외를 찾게 해주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난한 나라의 남성들이 소년병이 되는 문제, 군부대 근처의 기지촌 문제 등은 젠더 분석이 없었다면 결코 살펴볼 수 없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군사주의는 젠더 역할 규범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작동한다. 군사주의와 결합한 젠더 역할 규범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에서부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제정치에서 안보는 ‘군사화’되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남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안보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은 합리성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남성이 합리적이고 여성이 감정적이라는 오랜 편견과 함께 맞물려 안보의 영역에서 여성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sup>8)</sup> 한편 국제정치의 장에서 서로 갈등하

5) 권인숙 지음,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24쪽

6)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38쪽.

7) 김일란 "지금, 누가, 어디서 소외되고 있는지를 본다", 노컷뉴스, 2018년 5월 15일 기사, 2019년 12월 18일 확인.

8) 신시아 인로 지음, 김엘리 오미영 옮김,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2015, 88쪽

는 정치지도자들도 호전적인 남성성을 연기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다.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의 핵버튼 크기를 자랑하며 설전을 벌인 것이 좋은 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사내다움을 과시하는 국제 안보의 장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신시아 인로는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병역거부 운동 내부의 문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병역거부 운동은 늘 성별 분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병역거부자 남성이 또 다른 남성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애인(어머니, 여동생)은 옥바라지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병역거부 운동에서도 운동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주변화 되는 것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분석을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관계가 병역거부 운동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3) 학벌

2000년대 초반, 초기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축은 학생운동 세력이었다. 당시에는 병역거부자들도 대개 학생운동을 주도한 활동가거나,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학생운동은 이른바 대학 서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문대 중심의 학생운동 구조는 병역거부 운동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출신이었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 많았다.

이는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근성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병역거부 이슈를 접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지만 피상적인 정보만으로는 감옥에 가야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문제를 선불리 결심할 수는 없다. 반면 학생운동이 활발한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병역거부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자기 학교에 병역거부자가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를 실제로 겪어보고 대화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커다란 경험이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병역거부 이유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했는데, 이러한 방식도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맞서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타인에게 전달하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내면의 소리인 양심을 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겉으로 드러내려면 자신만의 언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교육과 자신의 언어로 타인을 설득해본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척 어려운 일이며, 교육과 훈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학생운동이 활발한 대학들-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 우선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공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학생운동 선배를 통해 병역거부를 접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든 탓도 있다. 차츰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병역거부를 시민불복종 저항으로 인식했던 초기 병역거부자들과는 분명 다른 결을 보여준다. 이들은 딱히 소견서를 쓰거나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병역거부자들이 필요로 했던 교육이나 경험들이 큰 의미가 없었다.

경향적으로 특정 대학들과 고학력자들 편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는 학력 혹은 학벌이 계급적인 문제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분석 또한 병역거부 운동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하

다. 당장 가족을 부양하거나 감옥에 다녀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선뜻 병역거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사람들의 경우 또래의 대학생들보다 빨리 입영영장이 나오는데,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다녀오면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역거부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직업 분포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증인을 뺀다면 병역거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되는 경우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자로 살아가는 이가 많다.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종사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된 건지, 처음부터 평범한 생활을 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것인지 선후관계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병역거부가 계급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계급적인 분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지구적 차원에서 군사적 역할은 이미 경제 적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사회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군인이 된다. 부자 국가의 부유한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더라도 거부할 입영영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행위자는 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전쟁은 주로 가난한 나라의 땅에서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군인으로 참전해 더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난민이 되게 만든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고, 누구나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선진국들과 다르게 병역거부를 하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똑같지만, 병역거부자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병역거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계급적인 요소는 한 국가 안에서, 혹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 4. 대체복무 법안의 다가올 쟁점

##### 1) 대체복무법안의

2020년, 처음 시행되는 대체복무제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36개월의 복무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이며, 현역 군인의 2배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원칙적으로 대체복무는 군복무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더 긴 기간을 복무한다면 그래야만 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경우는 인권 침해라고 여겨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대체복무 기간이 통상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인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된 것은 대체복무의 효용성 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교정시설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대체복무를 합숙 복무로 전제한 뒤, 현재 합숙시설이 갖춰진 곳만 찾은 결과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복무가 필요한 사회 공적 영역을 찾고, 대

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복무기관도 늘고 그에 따라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업무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유엔 등 국제사회, 한국 국가위원회가 주장한 내용들-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도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군사 기관과 분리된 독립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복무 법안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비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제도를 만드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작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제도만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잘 정착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체복무법안의 세부사항을 하나씩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법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입각한 판단 때문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체복무법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보다는 제도 악용을 핑계 삼아 사실상 군 기피자를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대체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권한과 입영대상자들에게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안내하는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점차로 삭제되거나 후퇴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대체복무를 바라보는 입법자들의 시선이 양심의 자유보다는 처벌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앞으로 다가올 문제, 양심에 대한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서는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국회 국방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각각 5명씩(국방위원장 4명) 추천하며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자의 진술과 여타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sup>9)</sup>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이 일종의 기준이 되어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대한 심사 과정을 추측하고 논의해볼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제외한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결정과 대법원의 2018년 11월 무죄 선고 이후에도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병역거부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입영영장을 받았을 때 바로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 입영영장을 연기했기 때문에, 검사의 악의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서, 평소에 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활동을 하지 않아서, 평화활동에 참여했지만 판사가 보기에 부족해서 등등. 각각의 판결문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심’을 판단하는 데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양심은 사람에 따라 형성 시기, 형성 사유, 발현되는 모습이 각기 다르다. 살아가면서 특정한 경험에 따라 급격하게 형성되기도 하고 서서히 자리 잡는 양심도 있다. 적극적으로 양심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양심을 마음 속에 간

9) 전쟁없는세상 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http://www.withoutwar.org/?p=15799>

직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양심의 개별적인 속성이 무시된 채, 딱 하나의 틀, ‘진정한 양심’과 다른 형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양심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처럼 협소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협소하게 해석되어, 보통의 국민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절대 변하지 않고 형성 즉시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무릅쓰고라도 발현되어야만 진정한 양심이고 그러한 양심의 자유만 보장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양심의 고뇌를 느끼다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는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 내용에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하도록 하고 병역거부자들 또한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무척 중요한 과제다.

맺음말 , 다양한 자리에서 평화를 채워가야 한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병역거부 운동이 반군사주의 운동을 펼쳐가면서 교차하는 여러 지점으로 젠더, 학력, 계급, 인종 등을 살펴보았다. 군사주의는 각각의 지점들과 여러 겹으로 교차하면서 상호작용한다. 이 때문에 병역거부 운동의 대응 또한 입체적일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만 보더라도 전시 성폭력은 젠더 문제이고, 미국에서 중산층 계급에 속한 대학생들은 주로 병역거부를 한 반면 가난한 계급의 청년들은 전쟁에 참여한 뒤 탈영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를 했다는 점은 계급과 학력과 인종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병역거부 운동의 입장에서 병역거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점들을 두루 살펴보는 것은 병역거부 운동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척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을 동일한 얼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 평화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 살아가는 사회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미국에 사는 유색인종 여성의 평화와 유럽에 사는 중년 남성의 평화는 미국과 유럽의 거리보다 더 멀 수도 있다. 가난한 나라의 남성들이 소년병이 되어 군사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은 전쟁과 연관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처럼 젠더에 따라, 계급에 따라, 인종, 학력, 사는 지역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다르고 저항의 방식이 다르고 평화의 얼굴이 다르다.

병역거부 운동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평화의 정의, 평화의 얼굴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평화의 얼굴을 발굴해내면서 그 얼굴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떤 점을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역할이다. 거대한 얼굴을 가진 불상 하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11개의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조각하는 일에 가깝다는 생각해본다. 병역거부 운동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의 얼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선이 되었을까』, 신시아 인로 지음, 김엘리, 오미영 옮김, 바다출판사, 2016.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경계, 2018

『대한민국은 군대다』, 권인숙 지음, 청년사, 2005.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임재성 지음, 그린비, 2011.

『감옥의 몽상』, 현민 지음, 돌베개, 2018.

『저항하는 평화』, 엄기호, 김종대, 강인철, 정희진, 서경식, 조영선, 하승우, 최현정 지음, 전쟁 없는세상 엮음, 오월의봄, 2015.

### 논평, 성명, 기타 선언문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http://www.withoutwar.org/?p=14675>

[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http://www.withoutwar.org/?p=15799>

[논평]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 - 대법원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1주년에 부쳐  
<http://www.withoutwar.org/?p=15713>

[논평] 법원은 모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잇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에 부쳐 <http://www.withoutwar.org/?p=15574>